

「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28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1. 개정이유

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대책을 포함한 안전도시종합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인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안전도시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정비함(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).
- 나.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회의 기능을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제2항 신설).

다.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 구성 및 운영, 실무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8조부터 제11조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)

(전화 042-270-5124, FAX 042-270-5029, E-mail : ykh507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5년 마다”를 “매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의 기능은 「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대행한다.

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<u>5년마다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안전도시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	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<u>매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<삭제>
제7조(안전도시협의회 설치)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7조(안전도시협의회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----- 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	<삭제>
3. ~ 5. (생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대행한다.
제8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<삭제>
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
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	

현행	개정안
<p><u>호의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<u>1. 대전광역시교육감</u></p> <p><u>2. 대전지방경찰청장</u></p> <p><u>3. 시 자치구청장</u></p> <p><u>4. 시 시민안전실장, 보건복지여성국장, 환경녹지국장, 교통건설국장, 소방본부장</u></p> <p><u>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<u>1. 대전광역시의회의원</u></p> <p><u>2. 안전도시 추진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·단체의 장</u></p> <p><u>3. 그 밖에 안전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<u>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9조(협의회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<u>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<u>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된다.</u></p> <p><u>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><u>제10조(실무협의회) 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시민안전 실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<u>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1. 시, 대전광역시교육청, 대전지방경찰청의 분야별 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</u></p> <p><u>2. 시 자치구의 안전관련업무 담당국장</u></p> <p><u>3. 안전도시 추진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·단체의 임직원</u></p> <p><u>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실무협의회 간사는 안전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
<p><u>제11조(관련기관의 협조요청 등)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·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

관계법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6조의2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
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업무를 관장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73조의3(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·조정) ①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·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.